

광주 ‘매입형유치원 사업’ 존폐 기로... 시교육청 전면 재검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해 2019년부터 추진
 3년간 공립전환 사업유치원 1곳...경찰수사까지
 교육단체 “사업중단하면 사립유치원에 돌아갈 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공립전환 사업(매입형유치원)’이 3년 만에 경찰 수사까지 받는 등 존폐 기로에 놓였다. 시교육청은 당초 5개원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1개원만 공립전환 되는 등 성과까지 미비해 사

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매입형유치원 사업’에 대한 올해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매입형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올해 3월까지 5개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업 초기에는 2곳 선정에 13곳이 지원해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학부모 동의’ ‘교실 8학급 개설 가능’ ‘통학 여건’ 등 비교적 까다로운 기준이 제시됐지만 최종 1곳이 선정돼 지난 2020년 3월 공립으로 전환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건물과 토지 등을 4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에도 3개원 공립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종 2개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1개원은 학부모 동의를 얻지 못해 자진철회 했으며 1개원은 ‘학부모 운영위 회의록 조작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정황까지 드러나 전 시의원은 해외로 도피했으며 경찰은 지난 22일 시교육청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5월 사업 철회 의사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입형유치원 선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부모 동의 여부인데 그동안 전환된 곳은 1개원뿐이어서 올해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해 올해 말에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 관계자는 “매입형유치원 사업은 끊이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다”며 “이마저도 한 사립유치원이 악용해 사업의 순수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이 사업 중단 결정하면 일부 사립유치원의 농간에 돌아갈 꼴이다”며 “본래의 목적인 공립유치원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재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광주 구간 경계조정 기준 논의 중단 ‘새틀짜기’ 합의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엔 ‘공감’ 세부안 ‘동상이몽’...중장기 검토키로

수년째 표류중인 광주지역 구간(區間) 경계조정이 민선8기 들어 다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졌으나 큰 틀에서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세부안을 놓고는 이견이 커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을 예고했다. 대·중·소폭안을 골자로 한 용역 결과에 기반한 그동안의 논의는 중단하고, 재정·인구·복지·문화인프라 등에 기반한 자치구별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새틀을 짜기로 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23일 오후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에서 행정구역(구간 경계조정) 개편 관련 회의를 열었다. 민선8기 들어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머리를 맞댄 첫 회의로, 강기정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 교육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2시간 남짓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형적 선거구와 자치구간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어느 지역을 어떻게 조정할 지를 둘러싼 세부안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의 이견을 보였다. 진통 끝에 참석자들은 2018년 용역 결과인 대·중·소폭안을 기반으로 한 논의와 2020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최종안으

로 제안한 중폭 개선안에 대한 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재정·인구·생활 인프라 등에 기반한 자치구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계 조정의 새틀을 짜고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 동·서·남·북·광산으로 분류된 5개 자치구 명칭 변경을 포함도 시와 5개구, 교육청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부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다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됐고, 이듬해 11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용역 결과 제시된 ‘대폭안’은 북구 가산구인 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과 다선지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광산구 나선지구인 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중폭 개선안은 북구 다선지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고, 소폭안은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정승호기자



“지화자 좋다” 23일 오후 광주 북구 용전마을에서 제23회 용전노래공연이 열린 가운데 (사)용전노래보존회 소속 풍물패가 논매기 공연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전남도 ‘휴가철 대유행 차단’ 전면 대응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도민 동참 홍보 강화

전남도가 고강도 방역조치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 여름 휴가철 대규모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25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과 함께 도민 대상 방역수칙 홍보 활동 강화 등 감염병 확산 차

단을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전남에서도 BA.5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자연면역 감소, 휴가철 이동량 급증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다. 7월 2주차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763명으로 전주 대비 2배 이상 급증해 방역관리 개선과

도민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축제·행사장, 휴양지, 여가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70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선 곧바로 권고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2022~2023 문화관광 지정축제

제15회 정남진 강릉 목축제

7.30(토) ~ 8.7(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